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 전원 고발

-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비리 연루 의혹’ 관련 중대한 증거가 공개된 시점에 조직적으로 집중 유포 ... 국민주권주의 와해시키는 중대 사회위해범죄로 엄단 필요
- 민주당, 악랄한 허위 메시지의 생산 경위와 전파 경로 등을 밝혀 가담자 전원에게 예외 없는 사법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악질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유포한 관련자들 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격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미 여러 차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허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시킨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라며, “관련자들은 예외 없이 전원 고발 조치해 반드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이 후보를 파렴치범 내지 극악범으로 왜곡하는 중대한 명예훼손인 점, 선거일이 2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유포 행위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비리 연루 의혹 관련 중대한 녹음파일이 공개된 시점에 집중적으로 개시된 점, 동일한 메시지를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급속히 전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국민주권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위해범죄로 마땅히 엄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지원단 소속 조상호 변호사를 통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의 소년원 입소 전력 등에 대해서는 이미 2022. 3. 3.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양당 간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또한 타인의 발언 인용에 관해서도 판례는 “피고인들로서는 당연히 제보자의 의도 등을 의심해 그 제보내용의 진실성을 처음부터 검증해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제보의 검증의무를 인정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

이에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그 반대사실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 또는 소명이라도 내놓지 않는다면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허위사실공표 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인바, 즉시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 형태의 악랄한 허위 글을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받고 이를 전파하였는지 그 전후관계 가담자 전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②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